혐오시설은 옛말…광주 '쓰레기 소각장' 유치전 치열

동구 1·서구 2·남구 1·북구 1·광산구 1곳…개인·법인·단체 참여
타당성조사 등 입지 선정절차 돌입…1000억대 지역발전 지원 혜택

광주시가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건립하기로 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 유치전이 예상을 깨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생활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과거 인식을 벗어나 '최첨단 친환경 시설'로 자리잡은데다,

광주시에서 약속한 1000억원대의 지역발전 지원금 등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몸값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친환경 자원회수(소각) 시설 입지를 공모한 결과 모두 6곳이 신청했다. 서구 2곳, 동·남·북·광산구 1곳씩이다. 단체와 법인 자격으로 신청한 곳이 1곳씩 있으며 나머지 4곳은 개인 자격이다. 소각장 후보지 공모에 신청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예상을 벗어난 치열한 경쟁이라는 평가 등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접수를 시작한 공모는 부지 면적 6만6000㎡(자연녹지 지역 기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동의를 얻은 자치구, 개인, 문중 대표, 단체 등을 응모 대상으로 했다.

여가 공간, 편의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오염물질은 최소화, 에너지 활용은 극대화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계획이 신청을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광주시는 분석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를 위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지난해부터 광주 곳곳에 홍보영상 송출, 시민 대상 오픈형 용역 보고회 개최, 타 지역 선진시설인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견학 등을 진행했다.

시는 또 주변 지역 등에 600억~800억원대 편의시설 설치, 주민 숙원 사업 추진비(300억원)와 자치구 교부금(200억원) 등 1000억원대 특별 지원 제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왔다.

광주시는 신청지를 대상으로 주민 동의, 면적 등 공모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입지 후보지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이후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 영향평가 결과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광주에는 2016년 12월 상무 소각장 폐쇄 후 대형 소각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광주 생활 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거나 나주에 있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로 보내지고 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준 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업추진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장마 대비 배수 펌프장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가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지난 24일 보성 회천면 산사태 취약지 관리 실태와 보성읍 배수펌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위험지역 현장 점검에 이어 25일에는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호우피해 대비 재난대책보고회를 소집해 대응 계획을 검토했다. 〈전남도 제공〉

카카오, 장성에 데이터센터 설립 4900억 투자

전남도 오늘 투자협약…데이터센터 클러스트 조성 총력

전남을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전남도의 행보가 분주하다. 태양광·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특별법)이 통과된데다, 지방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등을 투자 유치의 지렛대로 삼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는가 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데이터센터의 전남 이전·신규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애초 밝혔던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 추진 계획에 비해 진행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점에서 송변전소 구축 일정을 앞당기고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조도 요구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6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카카오측은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장성 남면 일대 첨단 3지구 1만여평 부지에 4900억원을 투입,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외에 ▲기업도시(솔라시도)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투자규모 10조) ▲순천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투자규모 3000억) ▲광양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투자 규모 5200억)가 들어설 예정이다.

기업도시 내 데이터센터의 경우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1085만㎡ 부지에 조성되는 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 운영된다. 전남도는 여기에 오는 2030년까지 10조 규모로 데이터센터 25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 움직임도 전남도의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가 통과시킨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 등이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수요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서울, 경기도, 인천이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데이터센터에 전기 시설부담금 50% 할인 등 혜택을 주도록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한 상태다. 하지만 기대만큼 조성 속도가 빠르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많다.

순천 NHN 데이터센터의 경우 해룡면 일대로 검토됐던 부지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첨단 산단 일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며 광양 KT데이터센터도 애초 투자사와 운영사가 바뀌면서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남의 경우 한전의 변전소 구축 일정이 늦춰지면서 데이터센터 1기 준공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전남도도 최근 열린 '도지사 공약사항 보고회'에서 이같은 '데이터센터 클러스트 조성'의 부진 사유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복지부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고려"

조규홍 장관, 복지위 회의 답변…전남도, 환영 입장문

정부가 전남의 오랜 숙원인 지역 국립 의대 설립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가 이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의대가 없는 도내에 반드시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충 과정에서 지역 의대 설립 문제를 같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23일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지역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충과 같이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환영 입장문'을 통해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하지만 지방의료원과 지역병원은 의사 구인난을 겪으면서 기초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있고, 공중보건의 지속 감소로 사실상 의료공백 상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여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지역 거점 컨트롤타워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국립의과대학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독일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고령화와 지방의사 부족, 팬데믹 등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공공성이 담보된 국립의대를 설립해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고, 의료공백 상태에 직면한 전남에 지속 가능한 의료기반이 갖춰지도록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름철 전남 농업재해 예방책 수립

道, 취약시설 7338개소 점검·보험료 1422억 지원

올 여름 엘리뇨에 의해 이상기후에 그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시·군, 농협,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기상상황 전파, 재해유형별·품목별 대응요령 안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추진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수리시설 4466개소, 과수·원예시설 630개소, 축산시설 2242호 등 재해 취약시설 7338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농작물 생육상황 등 분야별 상습 피해지역을 사전 정비해 피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매년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1170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150억원, 농기계 종합보험 102억원 등 3대 농업정책보험에 1422억원을 지원하고 가입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시·군, 농협과 함께 7월 14일까지 한 달간을 보험 가입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 농업인이 빠짐없이 가입하도록 마을별 홍보방송 실시, 미가입자 대상 안내문자 발송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름철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무엇보다 농업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호우, 태풍, 가뭄 등으로 농작물 3만303ha, 농업시설물 29ha, 가축 7만5000마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로 386억원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